

국고보조금 사용 설명서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부정수급 관리까지

국고보조금 사용 설명서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부정수급 관리까지

Contents

01	보조사업자 선정	1
02	보조금 교부	2
03	사업수행	3
04	보조사업 정산	5
05	보조사업비의 이월	7
06	사후관리	9
07	부정수급 관리	12

국고보조금 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 | | |
|---------------------|-------------------------|
| ❶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 | ❷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령) |
| 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침) | ❹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 ❺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❻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 ❼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

01 보조사업자 선정

법 제16조~17조, 지침 제13~15조

I 고려사항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민간 보조사업

- 1 재무안정성
- 2 자부담 능력
- 3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 4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 5 사업능력
- 6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지자체 집행사업

- 1 지방비 부담 가능성
- 2 지방재정 영향평가 결과
- 3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I 선정절차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모방식이 원칙, '공모 외 방식'은 필요시 심의

I 확인사항

▶ 중앙관서의 장(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 선정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해 점검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공모 외 방식의 경우에도 필요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추가}를 거칠 수 있습니다. (지침 제15조제1항)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뿐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추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추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13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사업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점검^{재량} 의무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14조의2제1항)

02 보조금 교부

법 제18조, 지침 제16~17조

I 검토사항

▶ 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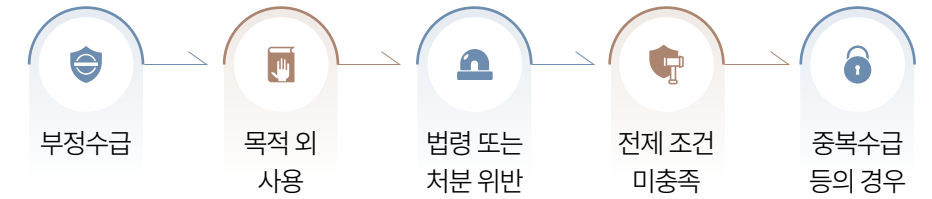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

I 교부조건

▶ 중앙관서의 장(상위 보조사업자)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등이 가능함을 명시



I 교부방법

▶ 중앙관서의 장(상위 보조사업자)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1차 교부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점검 후 추가 교부 결정



정산지연, 정보공시
불이행 시 삭감 교부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①부정수급, ②목적외사용, ③법령 또는 처분 위반, ④전제 조건 미충족, ⑤중복수급 등의 행위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추가} 명령 등이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16조제1항)

03 사업수행

집행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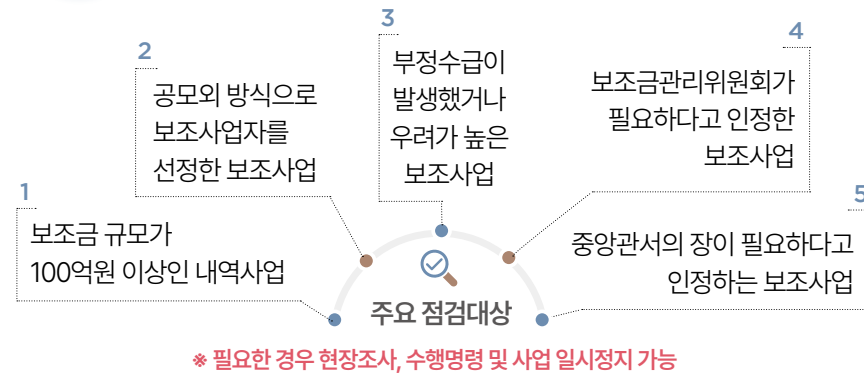
법 제25~26조·제36조, 지침 제32~33조

I 수행사항 점검

중양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파악

사업수행 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양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양관서의 장(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조사결과 사후조치

- 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 제한 등
- 2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즉시 e나라도움에 등록
- 3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

I e나라도움을 통한점검

모든 상위보조사업자 및 중양관서의 장이 직접 교부한 보조금 관리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월 1회 점검

- 1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3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e호조와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I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중양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점검실적을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계 약

지침 제21조

I 계약관리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 관리



I 계약체결

다음 계약을 체결하려는 민간보조사업자는 ①조달청장에게 위탁 또는 ②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 또는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1 2천만원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 2억원 초과
-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
-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초과

I 계약감독

쪼개기 계약 방지



중양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

내부 거래 방지



중양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중양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부당하게 여러건으로 나누어 계약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부정한 계약이 없도록 관리·감독 **신설**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21조제7,8항)

04 보조사업 정산

실적보고

법 제27조, 령 제12조, 지침 제26~27조

내 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명확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 제출

기 한 ▶ 다음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지자체는 3개월)

보조사업 완료



사업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 제출 지연시 교부금 삭감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12개월 이상: ~50%

실적보고서 심사 및 금액 확정

법 제28~29조, 지침 제18조,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내 용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 여부를 심사 후 적합한 경우 보조금 금액 확정

※ 필요시 현장조사 ※ 부적합 시 시정명령

- 보조금사용·증빙자료 제출방법**
- 1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은 e나라도움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
 - 2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e나라도움에 전자적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
 - 3 (예외)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① ②에 따른 사용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보조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신설됩니다. (지침 제18조제1~3항,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제1,3호)

반납

지침 제26조

I 반납대상

집행잔액



이자



수익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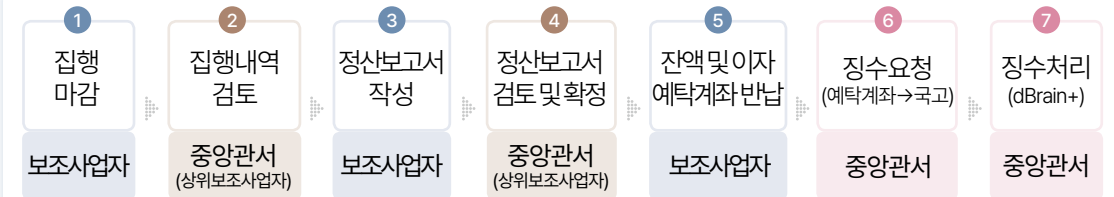


불인정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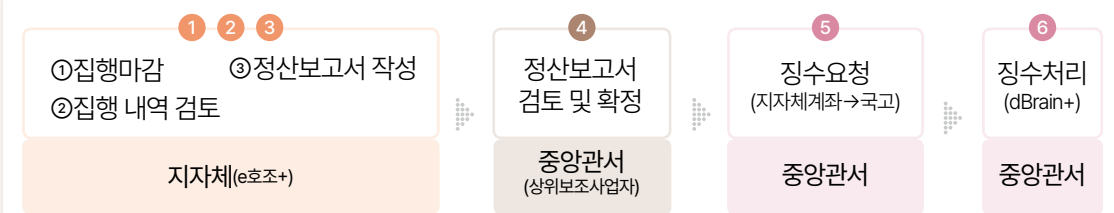


기 한 ▶ 사업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 ※ 정산절차 지연시 보조금 추가 교부 금지

e나라도움 상 정산·반납 절차(민간보조사업)



e나라도움 상 정산·반납 절차(지자체 집행사업)



🔍 알아두기

- 중앙관서장의 징수요청에 따라 국고(한국은행)에 반납까지 완료되어야 보조사업 정산 단계의 전 과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위의 과정을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반납금액이 징수되지 않는 주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절차 미숙지] 최종 국고수납까지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수납 대기] 미정산 중인 다른 사업과 함께 수납하려고 지연(대기)되는 경우
 - [시스템 미사용] 사업관리, 사업수행 등에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담당 변경] 담당자가 바뀌어 지년연도의 정산·수납상황을 모르는 경우

05 보조사업비의 이월

지침 제25조

원칙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 불가

예외적
이월 사유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했으나
지출 못한 경비 및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재이월 사유)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절차·기한



절 차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필요

기 한 회계연도 말



알아두기

- 보조사업비의 재이월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지침 제25조제2항제2호)'로 이월한 사업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참고 > 세출예산의 이월

국가재정법 제48조, 시행령 제20조



원칙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 불가,
예외적으로 이월 가능

이월사유

- 명시이월비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했으나 지출 못한 경비 및 그 부대경비(재이월 불가)
-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 계약법에 따라 공고된 공사, 재해복구사업)
-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보상절차 착수 또는 진행중인 경비,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간접보상비로 감정평가 계약 체결 또는 진행중인 경비,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경비, 예산의 15% 한도)
- 계속비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계속비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 가능)

절차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

06 사후관리

정보공시

법 제26조의10, 령 제11조의2,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6조

I 대 상

▶ 같은 회계연도 중 모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제외)



I 항 목

- | | | |
|------------|------------------|---------------|
| ① 보조금교부신청서 | ④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 ⑦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 ② 수입·지출내역 | ⑤ 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 | ⑧ 중요재산 |
| ③ 정산보고서 | ⑥ 회계감사보고서 | |

I 기 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회계감사보고서는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 시정명령(공시지연시점 및 허위공시 인지지점부터 매 2개월 이내) 불응 횟수에 따라 교부금 삭감
(1회: ~10%, 2회: ~20%, 3회: ~50%)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시정명령 시점을 공시지연시점 및 허위공시 인지지점부터 매 2개월 이내 **산정**로 구체화했습니다.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 5,6조)

정산보고서 검증

법 제27조, 령 제12조의2,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9조,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6조

I 대 상

▶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 보조사업 (지자체는 제외)



I 내 용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첨부하는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 제출



I 기 한

▶ 다음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완료



사업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법 제27조의2, 령 제12조의3,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4조,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6조

I 대 상

▶ 같은 회계연도 중 모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제외)



I 내용·기한

내 용

▶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



기 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회계감사 보고서 감리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9조

I 내 용

▶ 중앙관서의 장은 ①표본추출, ②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 진행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중앙관서의 장은 ①표본추출 또는 ②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를 진행** ~~재량~~ **의무**하여야 합니다.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9조제1항)

🔍 알아두기

- 정보공시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별 금액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여러 중앙기관에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국비) 총액 기준입니다.
- 정산보고서 검증은 사업별 국고보조금(국비)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취득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시점부터 15일 이내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부동산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변동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12월 변동상황 보고

처분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목적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

※ 위반시 반환 명령

①중요재산 취득 금액, ②효용가치 증가액, ③양도·담보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금액

공시

중앙관서의 장(지자체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e나라도움에 공시

공시기한

중앙관서의 장(지자체 장)이 취득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변동 보고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



07 부정수급 관리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법 제19조·제30~32조, 지침 제44~45조

취소사유

목적의 사용

법령, 교부조건,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취소통보

교부취소 결정시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통보



반환대상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 및 발생이자



일시정지 등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미교부 다른 보조금과 상계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부정수급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설}할 수 있습니다. (지침 제44조제2항제4호)

알아두기

- 부정 및 거짓 의도가 없는 단순 과오수급 역시 교부취소 및 반환 대상입니다. -(사례) 가족간거래 금지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조사업에 대해 e나라도움 상시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I 환수사유

1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목적외
사용

3
보조금
지급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I 환수대상

▶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I 지급제한

▶ 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 제한을 명(중앙관서의 장)



▶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 제한(보조사업자)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부정수급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설}할 수 있습니다.
(지침 제44조제2항제4호)

🔍 알아두기

- 부정 및 거짓 의도가 없는 단순 과오수급 역시 교부취소 및 반환 대상입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e나라도움 상시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사항

I 부가대상

▶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명받은 보조사업자 등



I 제재부가금

▶ 부정수급 등의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최대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I 가 산 금

▶ 제재부가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5% 이내에서 가산금 징수



🔍 알아두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결정 시 e나라도움 상시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수

I 징수대상

▶ 미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I 방 법

▶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사항

I 대 상

보조사업자



▶ 다음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1회이상)목적외 사용
(2회이상)법령, 교부조건,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위반(3회이상)

보조금수령자



▶ 다음 사유로 반환 명령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1회이상)목적외 사용
(2회이상)보조금 지급요건
미충족(3회이상)

계약업체



▶ 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 과정에서 부정수급 관련 사실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

I 통 보

▶ 보조사업 수행 배제가 결정된 경우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I 등록·보고

▶ 수행 배제 개시일 전까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알아두기

- 수행배제 처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로부터 통보(공문 및 e나라도움 등록) 받은 각 중앙관서(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 신속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받은 날로부터 해당 수행배제 보조사업자/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것을 안내

※ 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I 대 상

공시지연 시점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보조사업자

교부제한 보조금수령자

I 공표내용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내용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I 방 법

▶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알아두기

- 명단공표 결정 시 e나라도움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법 제39조의2, 령 제18조, 지침 제44~45조, 제49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지급대상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지급기준

부정수급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 신고인의 기여도에 따라 20퍼센트까지 감액하거나,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 설정 가능



지급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의

지급기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각 중앙관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 **신설**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49조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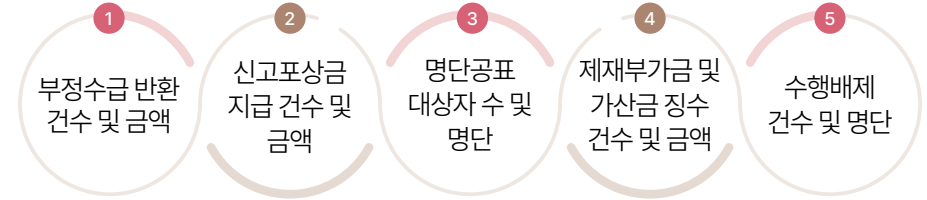
🔍 알아두기

- 신고포상금결정 시 e나라도움 상시 등록 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포상금 등록시 각 중앙관서의 dBrain+을 통한 신고포상금 전체 지급내역을 e나라도움을 통해 조회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에 대한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가능

부정수급 점검결과 등록

지침 제45조

등록내용



등록기한

상반기 3.31일, 하반기 9.30일까지 연2회 e나라도움에 등록
(명단공표는 3.31일까지 연1회)



보고

점검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 점검결과에 대해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e나라도움에 입력** **등록주기 확대(연1회 → 연2회)**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45조제1항)

🔍 알아두기

-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e나라도움 상 상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환수결정 금액 및 환수실적 금액 입력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기존 등록된 부정수급 보조사업에 대해서 추가 환수되었을 때, 환수실적을 지속 업데이트

I 점검대상



기재부 장관이 e나라도움을 통해 모니터링 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

I 점검내용



모니터링에 탐지된 내역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집행 모든 내역

I 점검기한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 장관이 통보한 점검대상 사업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완료 후 즉시 시스템 등록

I 재검토



기재부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가능

📢 '24년부터 달라집니다.

- 기재부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가능^{신설}
합니다. (지침 제45조의2제6항)

